

? 행정절차론을 알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총평

문1} 행정절차법에서 50점이 나오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50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지엽적인 부분 “영상정보처리기기”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 이 문제를 예상하여 모범답안처럼 쓰셨다면 행정절차론 수석이겠네요

하지만 합격권 컷트라인은 모범답안처럼 쓰는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충분히 활용하고 and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상식선에서 서술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못 썼다고 너무 당황해 하지 마세요~~ 저두 수업시간에 강조한 적이 없으니깐요 ~~

=> 최소값이자 최대값으로 16점정도는 맞아야 합니다.(16점이 100점 만점에 40점입니다.)

문2} ‘청문’ 전체로 묻지 않고 청문주재자로 한정하여 물었습니다. “청문” 위주로 서술하시고 청문절차에서 공부한 청문주재자를 결드리면 됩니다.

=> 1번문제를 못 썼으니깐 2번문제에서 청문으로 다진 실력을 모두 쏟아내야 합니다.

13점 ~14점 정도는 획득해야 합니다.

문3} “행정조사법” 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행정조사법에서 4문제 정도를 추려드렸습니다. 모의고사도 출제했구요

역시 1번문제를 못 썼으니깐 3번문제도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13점 ~14점 정도는 획득해야 합니다.

Ex)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의 조사의 사전통지와 제21조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0점)

문4}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의 재발급” 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이 문제도 1번문제와 더불어 지엽적인 부분에서 죽어봐라는 문제입니다. 최근 주민등록 재발급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 유리하시겠네요. 한번쯤 주민등록 재발급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등록법의 지식으로 서술해야 할 듯합니다.

이문제는 최소값이자 최대값으로 8점정도는 맞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1 ~ 문4까지 16점+13점+13점+8점 = 50점정도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은 꼭 공부한 곳에서 나오지 않아도 합격하실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쉬면서 오랜만에 찾아온 휴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이정민 올림 -

[문제1]

A시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시민공원을 설치하여 24시간 무료개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원에서 범죄와 무질서행위가 증가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A시의 시장은 甲은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甲의 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하여 논하시오. (40점)

< 수석 모범 답안 > : 걱정하고 공부하신 분 외에는 쉽지 않습니다.

I. 의 의

개인정보보호제도란 개인에 관한 정보가 부당하게 수집, 유통, 이용되는 것을 막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II.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1.

(1) 공개된 장소

1) 원칙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예외

-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1) 원칙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예외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영

-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2)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4)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6)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합격수준의 답안 > :

=>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활용하자, 어린이집 CCTV 신문기사(수업시간에 자료 배부 및 설명자료)를 철저히 활용하자.

I. 의 의

개인정보보호제도란 개인에 관한 정보가 부당하게 수집, 유통, 이용되는 것을 막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II.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1.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원칙)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완전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합성의 원칙)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설치

- ① 위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② 주정차위반 단속, 속도위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교통 체증 지역을 알기위해 교통정보의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 각 필요성에 의해 설치 되고 있다.

3.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할때는 사생활 침해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하여 비례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III.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련문제)

- (1) 최근 사회의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폭행과 관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있었다. 설치를 함에 있어 사생활 침해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면서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기사 내용과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 정보가 목적 외 수집, 오·남용되거나 무분별한 감시·추적에 쓰이는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법령 개선에 관한 기사이다.

<10월 3일 하루특강 자료, 7월~10월 기본강의 제본자료>

당정, ‘어린이집 CCTV’ 내달 임시국회서 재추진 [경상매일신문]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사생활 보호’ 조건을 달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카메라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촬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웹 카메라) 설치 허용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던 것을 다시 추진하되, 사생활 침해 최소화하는 기술적 보완을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이 이날 마련한 법 개정안은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에 따라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할 것,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 정보가 목적 외 수집, 오·남용되거나 무분별한 감시·추적에 쓰이는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선을 주문했다.

[문제2]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40점)

I. 의 의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청문절차에는 청문주재자의 공정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청문주재자를 중점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II. 적용범위

행정절차법은 청문을 ①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III. 예외사유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령 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③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IV. 청문절차

1. 청문주재자

- ①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의견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 (1) 청문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을 두어 청문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 (2) 청문주재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 (3) 당사자 등은 문서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청문에 대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V. 관련판례

대법원은 청문 예외사유인 ‘상당한 이유란’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문통지서가 발송되었거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문제3]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I. 의의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II. 조사의 사전통지 (17조)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III. 의견제출(21조)

- ① 조사대상자는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IV. 조사의 연기신청(18조)

-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연기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가 포함된 연기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4]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수석 모범 답안 > : 걱정하고 공부하신 분 외에는 쉽지 않습니다.

I. 발급 등

- ①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②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II.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 ②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2. 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②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 ②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III.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1.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수 있다.
2.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 기준·방법 및 절차, 관계 공무원의 방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합격수준의 답안> :

=>

1. 재발급

발급받은 후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II. 준비서류 및 재발급 신청서 작성

- (1) 훼손시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이며 준비하여 하며 다만, 분실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증명사진을 준비하여야 한다
- (3)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 (4) 주민등록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III. 신청 장소

- (1) 온라인인 민원 24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 (2)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IV. 임시신분증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시면서, 본인이 원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그 즉석에서 만들어 주는데, 이 "임시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되어 나올 때까지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